

野, 모든 의사일정 거부...예산심사·법안심의·청문회 중단

멈춰선 국회

정부가 3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안을 고시하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 국회가 멈춰섰다.

일단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의와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본회의 개의 시간에 합의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애초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의 의장이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해줌에 따라 단독 개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담' 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생에 진력하는 기조로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복구를 촉구하는 전략으로

새정치 오늘 본회의 일정 등 취소

새누리 민생 내세워 野 압박

맞섰다.

이날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사회적 기업거레소 설립을 위한 나눔경제특위 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여야 간 대립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을 계기로 정점에 달하면서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범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출속심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장기 농성이나 전면 장외투쟁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어 국회 공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당도 국회 보이콧이 민생 발목 잡기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후속 이슈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국의 중심에서 밀려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로텐더홀 ‘역사왜곡교과서반대’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재 회귀...전국민 불복중운동”

역사학계·교육계·진보 교육감·시민사회단체 반발 격화

정부가 역사학계, 시민사회, 교육계 등의 국정화 반대 및 철회 요구가 빚발쳤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면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상당수 교육감들은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고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화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와 관련, “독재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는 역사 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면서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독재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아울러 “타 시·도 교육청들과 함께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감 권한인 인준 도서를 공동 개발하고 장학자료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당장, 내년 예산에 따른 역사교육의 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예산 5000여만원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교육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교육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연 교육감과 5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한 인준교육청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예정보다 앞당겨 확정 고시한 것은 우리 교육의 퇴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도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와 ‘민주주의광주행동(준)’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백지화를 위한 범불체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교과서 집필의 주체인 역사학자들과 교사, 수용자인 학생·학부모 과반수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군사독재 방식으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단 확정을 하고 나면 여론의 반대가 체념으로 돌아설 거라고 기대하겠지만 확정·고시 반대는 불복중으로, 불복중은 박근혜 정권 심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역사학계 대거 불참 선언...20~40명 집필진 구성 난항

교과서국정화 일정과 남은 절차

이달 말부터 1년간 집필 작업

집필기준·집필진 공개도 쟁점

2017년 3월 새 국정교과서 보급

역사교과서를 국가 발행 교과서 체제로 바꾸는 방침이 3일 최종 확정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집필진 구성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집필진 구성에 곧 착수하고, 이달 말부터 1년 간 집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2월 검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치면 2017년 3월부터 새 국정 교과서가 일선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 새 교과서의 집필 방향을 결정하는 집필기준과 편수 용어에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이런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편찬 기준, 보수·진보학계에서 논쟁이 됐던 사건들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편은 앞서 9월 연 공청회에서 집필기준과 편수 용어 시안을 공개하고 현재 수정·보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집필진 구성, 편찬 기준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4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9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시안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을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 유의점으로 포함했다.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에 이승만 관련 내용이 과(過)에만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교과서 ‘편향성’의 한 원인으로 제시됐던 만큼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 주목된다. ‘건국절’과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어떻게 서술될지도 관심거리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왜곡없이,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서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서술도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필진 구성과 공개 여부도 논란이 예상된다. 집

필진은 위촉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20~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편은 앞서 집필진에 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경제 전문가도 참여하며 노·장·청,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요 대학 역사 관련 학과 교수와 주요 역사학회가 잇달아 교과서 제작 과정에 불참을 선언해 집필진 구성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집필진 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적인 공개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도 앞서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적절한 시점에 국편에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집필진 공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당시 “집필진은 우선 5~6명이 모여 집필에 착수하고, 대표 집필진은 이름을 내어 알리겠다”면서 “나머지 집필진 전부를 언제 어떻게 알려 드리느냐는 국편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여 집필진이 일부만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집필과정은 역사·국어·교육·헌법학자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가 심의한다. 교육부는 편향, 왜곡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편찬 도중 공청회, 웹 전시 등으로 집필과정 및 교과서 시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 여행

버스타어(2박3일)

상품가격	완도·여수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출발 7식, 목포출발 6식)
선박정보	블루나래호: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호: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1일차 목포 or 완도항 출발 → 제주항도착 → 비비방만들기체험(목포출발 제외) → 천연염색체험 → 메아리체험(제주오름 트레킹) → 저녁식사(갈치조림) → 숙소

2일차 숙소 → 한라산 원전정복(성판악-백록담 코스 / 중식 도시락) → 해수사우나 → 저녁식사(흑돼지구이) → 숙소

3일차 숙소 → 세계유네스코 등재 수월봉, 차귀도 탐방 → 점심식사(해물전골) → 조랑말승마체험 → 더미파크 기마공연(완도출발 제외) → 농수산물 직판장 → 제주항 → 목포 or 완도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사: 광주출발: 15:45 제주출발: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도착 후 렌터카 인수 → 자유일정 → 숙소

2일차 자유일정

3일차 숙소 → 자유일정 → 제주공항 도착 및 렌터카 반납 → 광주공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숙소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기준] 주중 17,000원 / 주말 23,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기준] 주중 19,000원 / 주말 26,000원
카니발, 그랜드스타렉스	[24시간 기준] 주중 39,000원 / 주말 49,000원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